

세대 전쟁인가, 세대 화해인가?

우 석 훈(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88만원 세대 저자)

1. 들어가는 말

‘88만원 세대’라는 책에 대한 첫 생각은 2006년 여름경에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한참 FTA 논쟁 속에 있었는데, 그 때 어떤 대학에서 열렸던 토론회에서 생겼던 충격이 첫 모티브였다.

“농민들에게 피해는 있겠지만, 어차피 당신들은 농사지을 거 아니고, 취직하더라도 마트에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당신들은 FTA에 대해서 찬성해야 한다.”

경제학과 등 통상 관련 학과 학생들이 청중으로 모여있던 이날 토론회에서 찬성 측으로 참석했던 교수가 했던 말이다. ‘아, 요즘 대학에서는 이렇게 배우는구나.’ 사실 나도 내가 진행하는 수업이 아니라면 다른 과목에서 혹은 다른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던 시절 혹은 파리에서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보수 쪽 선생들의 수업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론 사석에서야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가 토론회 가운데에서 오고 가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당시의 50대 교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20대 대학생, 이것은 전형적인 위계(hierarchy)에 의한 수직적 관계였다. 이후 FTA에서 시작된 내 고민은 과연 20대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할 것인가, 그렇게 이어졌다.

노무현 후반에서 이명박 정권에 이르는 나의 경제적 인식의 기본은, 한국 경제는 일본식 거품붕괴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의 고성장 국면을 지나서 자연스럽게 저성장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연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 특유의 불균형 성장 모델에서 균형 성장 모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전환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전개해나갔다.

이런 추론과 데이터 작업들을 하면서, 결국 다음 세대에게서 해소되지 않은 결정적 문제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때 주로 사용하였던 기본 모델은 폴 사무엘슨의 ‘세대간 중첩 모델(OLG: 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이었다. 부분적으로 UN 등에서 환경 논의를 할 때 일종의 윤리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세대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개념이었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해석할 때에는 일반적인 균형-불균형 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토지, 이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매우 특수한 종류의 부등가 교환 혹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경제가 조정과정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세대간 불균형이 생겨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여전히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 20평에서 40평까지, 스텔라 모델

간단히 80년대에 흔히 얘기하던 한국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20대, 20평 아파트, 엑셀

30대, 30평 아파트, 프레스토

40대, 40평 아파트, 스텔라.

소유와 상관없이, 어쨌든 20대에는 20평 아파트에서 엑셀을 타고, 30대는 30평 그리고 40대는 40대 아파트에서 스텔라를 타면 중산층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스텔라 모델’이라고 부르자.

약간 신화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국에서 투기와 ‘갈아타기’ 그리고 투자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토건의 시대에 개별적 중산층의 삶이 어땠는지 이 모델은 간단하게 말을 해준다. 아파트라는 눈으로만 본다면, 지금의 50대는 이런 시대를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청산하고 노후를 맞게 되는 게,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작동한 방식이다.

물론 50대에도 이렇게 살아오지 않은, 가난하거나 아파트 모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토건과 관련하여, 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 스텔라 모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의 방식대로 온 사람들 아닐까?

20대의 빈곤화는 이 스텔라 모델의 붕괴를 설명해준다. 20대는 더 이상 20평 아파트에서 삶을 시작하지 않고, 그렇게 연애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지난 시절에 한국의 중산층이 재생산된 방식으로 스스로를 재생산하지 못한다. 지금 한국의 토건 경제에서 생겨난 구조적 붕괴는 20대가 더 이상 이 시스템을 뒷받침해주기 어렵다는 것에서부터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청년 고용에서 노후 보장까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복지라고 불리는 완충 장치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한국이 토건의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IMF 경제 이후, 한국 경제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런 급격한 방식의 경제 전환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3. 2013년 체제라는 것이 따로 있는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2013년 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었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계속된 경제 운용 방식이나 양상에 변화가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용어이다. 그리고 그 대선에서 보수는 승리하였다. 어쨌든 좋다. 경제 양상에 변화가 올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한국 경제가 전개될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5월, 현재까지 얘기된 것은 두 가지 축이다. 한 가지는 4.1 대책으로 대표되는 ‘아파트값 부양’을 위한 토건 대책, 또 다른 축은 아직은 모호한 ‘창조 경제’, 이 두 가지이다. 선의로 해석한다면, 두 가지 힘 중 어느 쪽 힘이 강할 것인가, 그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물론이고, 세대간 경제 배분의 양상도 바꾸게 될 것이다.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자.

1) 생애첫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혜

4.1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큰 것은 생애첫주택 구입자들에게 주는 취득세 감면과 DTI(Debt-to-Income) 완화 등 대출 특혜이다. 누가 이 생애첫주택 구입자인가, 이 해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상식에 따라 20~30대로 보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양상을 예상할 수 있다.

하여간 기본적으로 정책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20~30대여, 빚내서 집 좀 사주세요.”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 가처분 소득 혹은 출산율 등 복잡한 변수를 다루어서 행위를 추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세대의 상대적 고소득층의 외제차 선호도 같은, 대체 변수로 생각해보는 방식도 있다. 전체에 해당하는 변수는 아니지만,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아파트를 살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청년층의 외제차 선호도는 물론이고 실 구매 자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걸 해석하는 방식 중, 집보다는 외제차가 먼저라는 새로운 행동 패턴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전세세입자들의 주택 구매

지금 정부와 토건업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전세세입자들에게 ‘집값이 올라간다’는 시그널을 주어서 그들이 완화된 주택 대출 덕분에 자신이 살던 집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대가 30대의 20평짜리 아파트를 사주고, 30대가 40대의 40평 아파트를 사주고, 다시 40대가 순차적으로 그보다 더 큰 주상복합의 대형 아파트 등 지금의 50대가 가지고 있는 대형 아파트를 구매해주면 이 모델에서는 해법이 나온다. 물론 그 해법이 장기적으로도 유효할지는 별도의 문제지만, 지금 막혀 있는 고착 상태에서는 탈출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를 유지하려는 힘 보다는 소위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미 서울에서는 월세-반전세가 전세 규모를 넘어섰다. 이는 세입자들이 주택 구매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반영해준다.

내가 예상하는 것은, 주택 가격이 전세가격보다 역전되는 현상이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2년 단위의 전세 계약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은 전세가는 매매가의 70%에 육박한다. 그리고 경매 낙찰가가 매매가의 60~70% 선에서 결정된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미 많은 지역에서 주택의 거래가는 이미 전세가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자신이 사는 주택을 구매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택 보유자들의 꿈에 불과한 것 아닌가?

3) 주택연금의 세대별 문제

세대간 경제 문제에서 이번에 또 하나 두드러진 것은, 역 모기지론 즉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50대로 낮추어준 것이다. 하우스 푸어 등 지금의 왜곡된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하면 주택연금을 조기에 가입하고 부채 문제를 일부 완화시킬 수 있게 해준 것은 방향은 옳다.

그렇지만 주택 가격의 추세적 하락 혹은 폭락을 예상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주택연금의 강화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공공경제의 지불 주체가 되는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이기도 하다. 물론 나중에 그들도 나이를 먹으면 주택연금으로, 자신이 - 혹시 - 가지고 있는 주택을 정부에 넘기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4) 정년 연장은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대선 때 50대가 보여준 정치적 힘은, 그들의 숙원이던 정년을 60세로 바로 연장시켰다. 기업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금 총액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은

청년들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의 안정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가 20대의 경제 문제를 볼 때, 임금 총액이나 알바를 포함한 고용을 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것은, 다년간 혹은 장기 고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시각이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종신고용 혹은 단기고용이 가능할 때, 비로소 결혼과 출산 혹은 또 다른 방식의 장기계획 등 개인의 인생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기 고용인 상태에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동일 분야에서의 장기 근무만이 일종의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현상이 일어나며, 숙련도가 높아져서 장기적으로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알바 고용이 개별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는 지식의 집약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부작용은 한 경우이다.

정치적으로 힘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베이비 부머가 정년을 지나간 다음에, 다시 임금 축소와 함께 정년 단축이 일어나는 경우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 경우는 세대 갈등만 남고, 특정 세대에 대한 혜택 논란만 남는다.

5) 창조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창조 현상은 복합적이어서 일률적으로 단일화시키기는 어렵다. 큰 문제에서 하나, 작은 문제에서 하나,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다.

첫째, ‘소왕국 현상’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황우석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IMF 경제 위기 이후 도입된 PBS(Project-Based System)에 의해서 연구책임자(PM)이 스타가 되면서 생겨난 소왕국 현상의 부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실무연구자들의 실질 임금과 권한이 줄어들고, 이를 결정하는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과제들이 대형화되면서 누구도 연구책임자를 제어할 수 없는 소왕국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황우석 사태를 이해한다.

자, 우리가 정부기관이든 민간이든 혹은 대학이든, 연구실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처우, 정규직이라도 불안정한 미래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불필요하게 해외 유학을 갔다 와야 하고, 비정규직 혹은 임시고용 상태의 연구직 신분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는가? 그러나 실제 혁신은 연구책임자의 노트 위에

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처우와 장기 연구 기반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창조 경제가 실제 성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말만 거창한 거대화된 연구의 연구 책임자들의 소왕국 현상으로 전락해버릴 것인가, 그 분기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토건으로 가는 돈이 더 많을 것인가, 명목이야 어쨌든 창조경제로 가는 돈이 더 많을 것인가?

올해의 추경은 대부분 토건으로 갔고, 주요 정부정책도 그렇게 움직였다. 2014년 예산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돈들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여기에 중대한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부양 등 토건으로 주요 정부정책이 움직인다면, 2013년 체계는 별도로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제는 좀 복합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맺는 말을 대신하여 : 나는 세대 전쟁으로 갈 것 같아 보인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축은 현재로서는 토건이다. 수출 경제, 지역 경제 혹은 복지 혹은 사회적 경제와 같은 부수적 키워드들이 일부 있지만, 큰 돈은 금융과 토건, 두 축으로 움직인다.

한국 경제가 토건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다면, 50대와 청년, 정확히는 ‘50대 보수’와 ‘일반적 청년’ 사이의 문제에서 몇 가지 타협점을 찾아볼 수 있고,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수준이 ‘적절’인가에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현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정도의 아파트 상승률을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나는 감가상각률 만큼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50대, 특히 정부, 공기업, 언론, 재계의 이해당사자인 ‘50대 보수’의 의사결정권은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그를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고, 이걸로 경제적 성과를 내는 데에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선 청년들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위할 것이다.

이 마주치는 두 개의 힘은, 결국은 일본식 장기공황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이 제로에 가깝게 형성되고, 은행돈은 무한대로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이 구조에서, 창조나 혁신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메워줄 협동조합이나 소셜 벤처 같은 사회적 경제는 구색맞추기로만 벌려진 상황, 그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작은 경제적 성과를 놓고 세대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부수적으로 젠더 갈등, 지역별 갈등 그리고 아직은 맹아 단계인 인종 갈등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직은 세대 전쟁으로 전개되지 않을 결정적 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